



21세기 국민 환경의식조사(3)

자료제공 환경부

13.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를 지적한 의견이 41.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불법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34.7%)순으로 높게 나타남.

국립공원 보전 방안으로 환경전문가들은 '각 국립공원 수용능력에 맞는 입장객 제한'(26.8%)과 '불법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26.8%),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26.2%) 등을 비슷한 비율로 지적함.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를 지적한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각 국립공원 수용능력에 맞는 입장객 제한'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남.

14.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관광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필

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3.1%로 나타났고, '자연훼손이 심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66.9%로 나타나, 개발보다는 자연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15. 생태계보전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생태계 보전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95.7%로 나타나, 생태계 보전지역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함께 생태계 보전에 대한 여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16.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한 찬반의견

습지나 갯벌 등의 매립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22.5%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74.5%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 및 갯벌 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7. 야생동물 불법포획자 처벌 및 명단공개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야생동물 불법포획자와 보신용 설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명단공개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의 대다수(90.1%)가 찬성한다는 긍정



적 의견을 나타내어, 야생동물 불법포획자와 보신용 섭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PART VI. 환경관련 재원 확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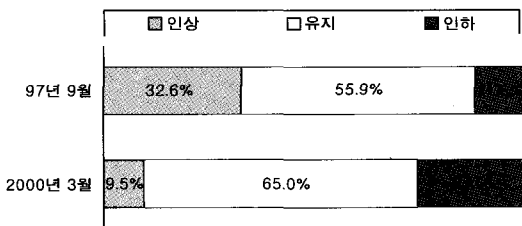
1. 쓰레기 봉투가격 조정에 대한 의견

□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65.0%가 '현행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냄. 반면 '현재가격보다 상승' 의견은 9.5%(143명), 현재가격보다 '하' 의견은 25.5%로 조사됨.

□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 의견은 22.8%가 감소하고, '하' 의견은 14.0%가 증가해, 현재의 쓰레기봉투 값이 예전보다 비싸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재보다 상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143명에게 적절한 인상수준을 질문한 결과, 평균 인상율은 21.2%로 조사됨.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결과에서는 쓰레기 봉투가격의 적절한 인상수준에 대한 평균 인상율이 122%였음.

■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보다는 현재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저공해 천연가스버스(CNG) 이용의향

□ 저공해 천연가스버스(CNG)의 이용요금을 일반버스보다 상향조정했을 경우, 저공해 천연가스버스(CNG)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68.7%로 나타나 반면,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31.3%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저공해 천연가스버스(CNG)가 갖는 장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3.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찬반의견

□ 수질향상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으로 수도물 비용을 실제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4.9%, 반대의견은 45.1%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수질향상을 위해 수도물 비용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찬 성 : 대구경북(66.7%), 인천경기(64.0%), 강원 (67.9%)
- 반 대 : 부산경남(54.7%), 광주전라(53.0%)

4.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중과세'(43.9%) 방안과 '환경오염 유발 제품 부담금 부과 강화'(39.5%)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난 95년 조사결과 및 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중과세' 의견과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대한 부담금 강화'를 지적한 의견이 1위와 2위로 동일하게 나타남.

■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항 목	2000년 3월	97년 9월	95년 8월
	응답률	응답률	응답률
· 공해배출업소에 중과세	43.9%	42.1%	47.9%
·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	39.5%	38.7%	37.5%
· 환경복원 발행	9.7%	6.9%	4.2%
· 환경세 신설	6.9%	8.3%	8.5%
· 환경공채 발행*	-	4.0%	1.9%

* 2000년 3월 삭제 항목

PART VII. 환경주체의 환경개선 노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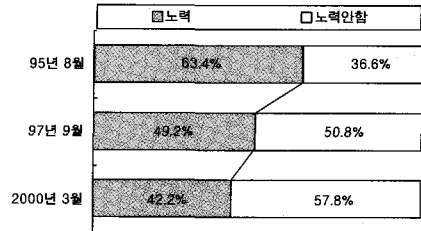
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평가

□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42.2%로 나타난 반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7.8%로 조사됨.

□ 지난 '95년 8월 실시된「월드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63.4%, 97년 9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사시에는 긍정 평가가 49.2%로 나타나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IMF 발생 이후 정부 정책

이 IMF 극복과 구조조정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분석됨.



2. 정부 발표 환경오염관련 지표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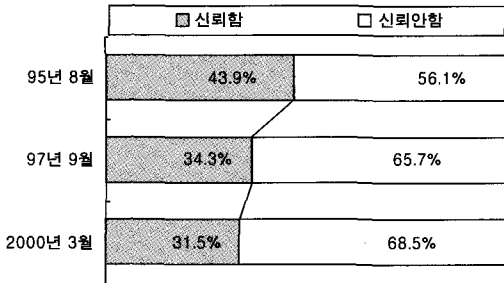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환경오염 관련 지표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긍정적 평가는 31.5%로 나타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는 68.5%로 조사됨.

■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오염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과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96년 1월「한국환경기술개발원」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는 43.9%, 부정 평가는 56.1%로 각각 나타남. 또한 97년 9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34.3%, 부정 평가 65.7%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96년 이후 정부의 환경오염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이 요망됨.[도표 참조]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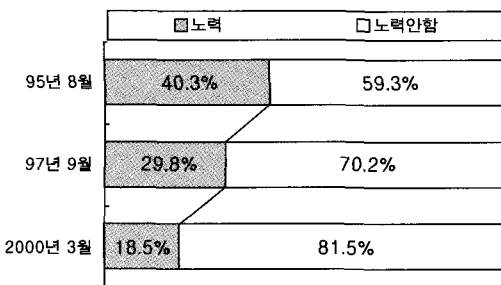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18.5%에 불과한 반



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는 81.5%로 조사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부정적 시각이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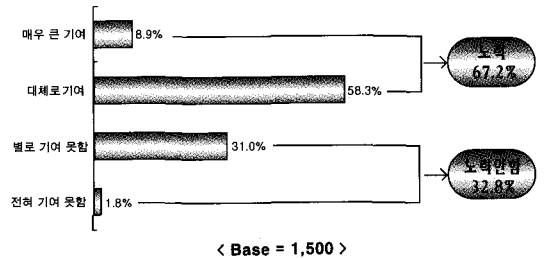
□ 지난 '96년 1월 실시된 「한국환경기술개발원과 중앙일보」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59.3%로 나타났으며,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결과에서는 부정 평가가 70.2%로 증가해, 이번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본 결과,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향후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됨.



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기여도

□ 현재 우리나라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67.2%)의 응답자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나타냈고,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8%로 조사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환경관련 모임에 대한 가입 여부 및 향후 가입 의향

□ 환경관련 모임 가입 여부에 대해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1.8%, '과거 가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95.0%로 조사되어,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모임에서의 활동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됨.

□ 환경 관련 모임에 대한 가입 경험이 전혀 없는 1,473명을 대상으로 향후 환경 관련 모임에의 가입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3.0%, '가입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47.0%로 각각 나타나, 두 가지 의견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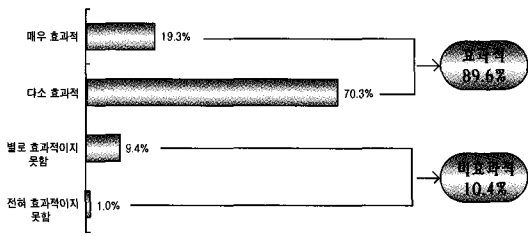


6. 민간환경단체의 정치적 시민운동 참여에 대한 의견

- 일부 민간환경단체의 정치적 시민운동 참여에 대해 정치적인 운동도 불가피하지만 '환경운동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한다'(40.6%)는 의견과 '순수한 환경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37.4%)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난 97년 9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사결과와 비교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환경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7.5%에서 37.4%로 증가함.

7. 환경부와 종교단체간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의 효과성

- 환경부의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89.6%)의 응답자들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낸 반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와 종교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의 긍정적 시각과 함께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효율적인 환경보전 활동 전개를 위한 종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방안 및 협력 체계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Base = 1,500 >

PART VIII. 지구환경문제 대응방안

1. 국제사회의 환경무기화에 대응한 국내 환경규제 추진 방향

- 국제사회의 환경무기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 국민의 대다수(94.0%)가 '국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내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국내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對外 경쟁력을 우선 강화함으로써, 선진국의 환경무기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보다 철저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찬반의견

- "기후변화협약 가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참여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93.1%)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환경전문가 역시 대다수(92.1%)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임.

PART IX. 환경과 주권 행사 및 개선 과제

1. 선거의 지지후보 선택시 후보의 환경정책의지 고려 정도



□ "總選 혹은 地自制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출마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意志)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85.7%로 나타난 반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의견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환경정책에 대한 후보의 의지는 일반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환경의식과 관련된 적합한 후보자像

□ 總選 혹은 地自制 선거에서 환경의식과 관련하여 적합한 후보자 像으로 '환경을 중시하며 개발을 고려하는 후보'를 지적한 의견이 1순위(69.2%)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개발을 중시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후보'(19.7%),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후보'(9.7%), '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후보'(1.4%)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환경이나 개발의 한쪽만을 주장하는 후보보다 환경 마인드를 중심으로 개발을 고려하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3.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해, 과반수의 유권자(53.3%)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긍정 평가를 나타냄. 반면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은 4.8%에 불과하였음. 단,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41.9%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유권자들은 후보의 환경의식을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중시 후보의 원내 진출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선 과제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선 과제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5.1%)과 환경오염 배출업체의 강력한 처벌(5.1%)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철저한 분리수거 방안 마련(4.9%),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 활성화'(3.9%), '매연 차량 단속 강화'(3.9%)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방안 마련과 이의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됨.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PART-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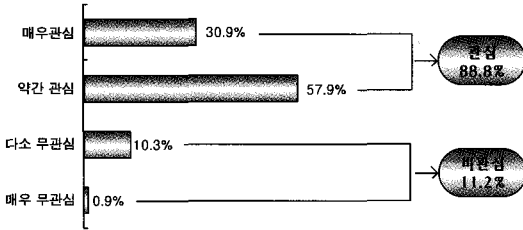
결과분석

□ 우리 나라 국민들의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관심있다'는 긍정적 의견은 88.8%(매우 관심 30.9%, 약간 관심 57.9%)로 나타난 반면, '관심없다'는 부정적 의견은 11.2%(전혀 관심없다 0.9%, 별로 관심없다 10.3%)로 조사되어 우리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 (94.1%), 40대(92.6%), 지역별로 인천/경기(90.9%), 광주/전라(91.8%), 강원(94.3%), 기혼자(90.8%),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



< Base = 1,500 >

특성별 분석

■ 과거의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95년 8월 조사(월드리서치)시에는 82.4%, 97년 9월 조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시에는 88.3%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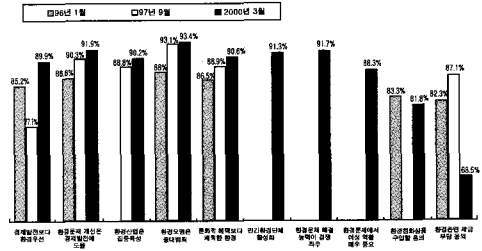
2. 환경관련 주요 의견 공감도

결과 분석

□ 환경관련 주요 이슈를 통해 환경관련 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환경오염은 중대범죄' (93.4%),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에 도움' (91.9%), '환경친화상품 구입용의' (91.8%), '환경문제 해결능력이 선진국·후진국의 구분기준' (91.7%),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 (91.3%) 등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오염은 반사회적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며, 21세

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의 공감대가 나타남.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공감의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환경관련 조세부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 흥보 다양화가 요망됨.



환경관련 주요 의견	2000년 3월		2000년 3월		2000년 3월	
	공감	비공감	공감	비공감	공감	비공감
①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89.9%	10.1%	77.7%	22.3%	86.2%	14.7%
② 환경문제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91.9%	8.1%	90.3%	9.7%	86.6%	13.1%
③ 환경산업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90.2%	9.8%	88.8%	11.2%	-	-
④ 환경오염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	93.4%	6.6%	93.1%	6.9%	88.0%	11.9%
⑤ 문화적 해택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90.6%	9.4%	88.9%	11.1%	86.5%	13.1%
⑥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91.3%	8.7%	-	-	-	-
⑦ 21세기에는 환경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분	91.7%	8.3%	-	-	-	-
⑧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88.3%	11.7%	-	-	-	-
⑨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	81.8%	18.2%	-	-	-	-
⑩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원금 때문이라면 환경관련 세금을 좀더 부담할 용의 있다.	68.5%	31.5%	-	-	-	-

다음호에 계속...